

국민을 올리는 불법운행차량 끝까지 추적하여 잡는다!!

추진부서 오산시 징수과 ☎ 031-8036-7221



개선배경

- 국가재정 악화의 주범인 고질적 체납 차량과 국민생활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운행(대포차)차량 단속 필요성 대두
 - 현재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는 약 2천 4백만 대이고 이 중 교통(차량)관련 고질체납 및 불법차량은 약 6백만 대로 전체의 25%차지
 - 전국 등록 차량 및 불법차량 현황

전국차량등록현황	불법(체납)차량	운행정지명령신고	의무보험미가입
24,365,978대	5,989,458대	97,038대	806,641대

- 불특정 불법운행(체납)차량 단속부처가 분리되어 있는 등 무작위 불법운행(체납)차량 적발 업무프로세스 시스템에 따른 시간 및 효율성 저조 등 국민 불편 사항 발생
 - 불법운행(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근거 및 소관부처(부서)

구 분	지방세 체납	운행정지명령신고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체납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세정 부서)	국토교통부 (차량등록 부서)	국토교통부 (차량등록 부서)	법무부 (교통부서)

- 소재지가 불명확한 고질 체납 및 불법운행차량 등 지자체의 통일된 적발위치 수집/분석 통합 연동 플랫폼 필요
 - 차량소재 사전파악, 단속 가능한 추적관리시스템 부재
 -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불법(대포) 차량: 약 100,000대 운행 중

※ 전국 지자체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보유현황: 200여개 시·군청, 약 300여대 보유



개선내용

- 사업명 : 클라우드 기반 불법(체납)차량 빅데이터 정보서비스
 - 사용개시일 : 2020년 1월 1일
 - 사용범위 : 전국 지자체(대포차 및 운행정지명령 신고차량) 단속부서
 - 시스템 개요

개선전

- ➔ 현장 실시간 조회 가능
(자동차세+차량관련과태료+
경찰서소관 교통과태료)

개선후

- ➔ GPS기반 위치정보 관리 영치시스템 구축
- ➔ 실시간 체납 통합조회 및 단속 관리 웹(web) 구축
- ➔ 세외수입과태료 징수촉탁 매뉴얼 기능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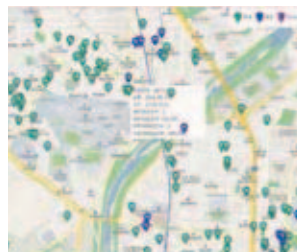
- 사업내용: 전국 자치단체의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운영, 이동 CCTV를 통해 적발된 체납 및 불법운행 차량의 위치, 경로를 빅데이터 수집·분석하여 추적관리 및 정보공유

※ 지자체별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설치 현황 : 전국 200개소

- GPS위치 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 및 정보서비스 구축
- 교통관련 체납세 징수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통합 징수 및 범법 차량 합동단속으로 사회 위험 요소 감소(6개부서 → 징수와 통합)



※ 체납자 소재지를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이용하여 맞춤형 체납액 징수



〈 빅데이터 정보서비스 사업개시 사례 〉

추진과정

- '19.04월 규제완화를 위한 정부기관과 업무협약
- ~ '21.11월 - 국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기도(교통정책과), 공공클라우드진흥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 '20.03.30. GPS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 기술구현 완료
- '20.05.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0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 선정
- '21.01.30. 클라우드 기반 체납차량 빅데이터 정보서비스 사업 완료
- '21.03.30. 클라우드 기반 체납차량 빅데이터 정보서비스 사업 개시
- '21.03.31. 경기도 외 시군방문 설명 및 홍보 : 9회 20개 지자체
- '21.04.30. 전국 20개 지자체 보급(경기도내 10지자체 포함)
- '21.05.07. 지상파 방송
- '21.08.16. 국회 홍기원국토교통부상임위원 업무협약(관련법령 개정안)
- '21.08.23. 국토교통부 업무협약 (빅데이터 정보서비스 보급 계획)
- '21.11.30. 국토교통부 · 국회 · 오산시 업무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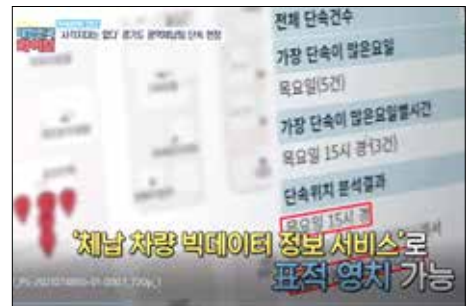


개선효과

- GPS위치기반 영치시스템 빅데이터 정보서비스 활용 불법운행차량 적발
 - 불법운행차량 304대 적발 및 공매처분 징수 : 40대(2020년 기준)
 - 전국 25지자체 50라이선스 보급
- (공공성 효용가치 기대) 사회 위해요소인 불법 및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전국적인 추적정보 제공을 통한 단속 증가로 공익성 제고 및 질서안정
- (조세정의실현 기여) 불법운행차량 소유자 적발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 불법 차량운행에 대한 인식 전환 계기 등 진정한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
- (고충민원해결 기여) 코로나19 발생 비대면 시대에 부응하는 4차 산업혁명 시 인공지능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불법 운행 차량 단속을 통해 생활 불편 해소



경기신문 2021.6.16.



지상파 방송장면 2021.5.7.



끈질긴 노력 끝에 획기적인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의 기반을 일구어내다.



오산시 정수와 손창완 031-8036-6841

1. 현재 우리나라의 불법운행차량의 현황 및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약 5천2백만 명이라고 한다. 이 중 노인·유소년 연령대를 제외하면 경제활동 인구는 약 4천만 명에 달한다. 이 중 국내 등록 차량은 약 2천4백만 여대이며 국민 2.3명중 1명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실제 도로상에 운행 중인 차량 4대 중 1대는 체납·불법 운행 차량으로 약 600만 여대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체납차량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를 가중시키는 동시에 불법운행 차량의 경우 일부는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는데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 GPS기반 영치시스템을 특별히 특허를 낼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나요?

불법운행차량을 현장 단속 중에 도로상에서 접촉사고가 난 차량을 보게 되었다. 한 대는 무한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반면 가해차량은 무보험 차량이었다. 피해차량 소유자가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차량은 적당히 합의를 보자고 보험처리를 기피하면서 이동하는 것이다. 가해차량을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고민하게 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거리를 달리는 불법운행차량을 주소지 인근에서 적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빅데이터화 하여 적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착안하여 피해보는 국민과 단속하는 공직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3.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특별히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중앙부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담당 사무관의 마인드 전환이었다.

차량 보유가 늘어나는 만큼 체납 및 불법 운행 차량(일명 대포차)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및 국민생활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운행 차량 단속이 미비한 데에는 '행정통합관리 플랫폼'의 부재에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정보 공유를 통한 상시 단속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불법운행차량 및 고질적 체납차량 적발 데이터를 모아 추적하고 적발하는 ‘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정보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조와 참여가 많이 필요하였는데 들어주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다.

그리고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발품삼아 직무수행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이 또 하나의 애로사항이었다.

4. 불법운행차량을 단속·적발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단속 적발하는데 법률적으로 뒤따라주지 못하는 것이다. 법령에서 불법 및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법을 집행하는 행정력에 아쉬움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5. 이 업무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추운 겨울 날씨에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사연을 듣게 되었다. 이혼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전남편의 차량이 명의 도용되어 체납자가 되었다. 그런데 무한돌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차량소유자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할머니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해당 차량의 소재지를 추적하여 해당 차량을 찾아서 강제 인도 명령 후 공매 처분하여 민원 해결을 했을 때가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으로 기억한다.

6. 담당자의 한마디

그동안 “국민을 울리는 불법 운행 차량 끝까지 추적하여 잡는다!”는 사명감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클라우드 기반 체납차량·불법 운행 차량을 적발하는 빅데이터 정보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세계 선진국들은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산업의 선점을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공공기관도 이제부터 4차산업 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그리고 빅데이터와 친해져야 하겠다.

빅데이터의 활용이야말로 디지털 혁신의 핵심이므로 나부터 역량을 강화하여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와 친해져야 하겠으며, 이를 통해 시민을 위한 행정 혁신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